격월간
정세와 동향

제6호
[2013_02_18]

모심의 살림의 길

- √ 2013년 국내외 정세와 동향
  - | 표류하는 세계 경제와 불안정한 미래
  - | 장기 저성장 시대의 새로운 변화와 도전
  - | 농업·먹거리에 대한 근본 대책의 필요성
  -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천 방향과 과제
- √ 2013년 지구촌과 한국의 사회운동
- √ 2013년 국내외 주요 일정 및 제도 변화

한살림
모심과 살림 연구소

- 목 차 -

2013년 국내외 정세와 동향

〔표류하는 세계 경제와 불안정한 미래〕

• 글로벌 복합위기 시대,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에 대한 경고 1
• 장기 불황이 만들어 내는 새로운 도전과 갈등 2
• 주요 국가들의 2013년 경제 전망과 영향 4

〔장기 저성장 시대의 새로운 변화와 도전〕

• 저성장 시대의 장기화 가능성과 새로운 과제들 7
• 경기 침체와 위축이 만들어 낸 인식과 태도의 변화 9

〔농업·먹거리에 대한 근본 대책의 필요성〕

• 점점 더 현실화 되고 있는 세계 식량문제 10
• 농업과 먹거리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과 대책 마련이 필요 10
• 양극화와 안전 문제가 농업과 먹거리 분야의 현안으로 등장 12
• 친환경 유기농산물 시장을 둘러싼 변화와 영향 13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천 방향과 과제〕

• 비상한 각오로 발상을 전환하고 체질을 바꿔내는 노력이 필요 15
• 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과 실천 과제들 16

2013년 지구촌과 한국의 사회운동

• 총체적 전환기, 한국 생명운동의 시대적 과제 19

2013년 국내외 주요 일정 및 제도 변화

• 2013년 국내외 주요 일정 27
• 2013년에 변화되는 주요 제도 28

2013년 국내외 정세와 동향

표류하는 세계 경제와 불안정한 미래

● 글로벌 복합위기 시대,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에 대한 경고

- 2013 다보스포럼에 나온 경고의 메시지

· 올해로 43회를 맞은 세계경제포럼(WEF), 일명 다보스포럼이 1월 23~27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려, 위기를 양산하는 '탐욕'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책임'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자본주의의 현실을 진단하는 시간을 가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보스포럼의 주제들>
- 2009년: 위기 이후 세계의 모습(Shaping the Post-Crisis World)
- 2010년: 더 나은 세계로의 개선(Improve the State of the World)
- 2011년: 새로운 현실(New Reality)
- 2012년: 대전환(Great Transformation)
- 2013년: 탄력적 역동성(Resilient Dynamism)

·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경제위기와 생태위기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당면하게 되는 복합위기가 세계를 충격에 몰아넣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이것을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이라 부름.

· 원래 퍼펙트 스톰은 두 개 이상의 태풍이 만나 영향력이 폭발적으로 커지는 자연현상인데, 이것을 사회 현상에 적용시켜 경제, 사회,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두 가지 이상의 문제들이 동시에 발생해 충격의 정도가 크게 증폭되는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됨.

· 포럼에서는 퍼펙트 스톰 현상의 원인을 경제적 측면과 생태적 측면으로 구분해 진단하고 있음.[1)]

- 세계 경제 시스템의 위기

·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난 지 5년이 지났지만 세계는 여전히 경기침체와 만성적인 재정 불균형, 심각한 소득 격차 등의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고, 적어도 앞으로 10년간은 이런 경제적 위험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실제로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을 정점으로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선진국과 개도국 경제의 동반 침체 현상이 이것을 이끌고 있음.
  - 2010~2012년 사이 성장률 변화: 선진국(3.0% → 1.3%), 개도국(7.4% → 5.3%)

1) 현대경제연구원, 2013, "2013년 다보스 포럼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내용 참조.

- **지구 생태 시스템의 위기**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따른 기후변화로 자연재해 발생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도 계속 커지고 있음.

・전 세계 자연재해 발생 건수가 1년 사이 약 10% 증가(2011년 820건 → 2012년 900건)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 또한 지난 30년간 평균 수준인 1,150억 달러에서 2012년에 1,600억 달러로 크게 늘어남.

・이런 상황에서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는 지난해 말 2012년 종료 예정이었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토의정서를 2020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함. 하지만 일본, 캐나다, 러시아, 뉴질랜드가 더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대표적인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과 인도는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교토의정서 연장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미국 또한 이번 의무감축국에서 또 빠짐으로써 사실상 협약의 의미는 크게 퇴보된 상태임.

・여기에다 경기침체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된 국가들이 그동안 추진해 왔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서둘러 축소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음.

● 장기 불황이 만들어 내는 새로운 도전과 갈등

- **불황이 장기화, 구조화 되면서 새로운 환경과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음**

・장기 저성장 시대를 맞아 기존의 고도성장 시기에 정상의 기준이 되었던 가치나 질서는 무너지고 저소비, 고실업, 고위험, 과다부채, 불안정과 갈등, 국가의 개입과 규제 강화와 같은 새로운 기준과 원칙들이 만들어지는 '뉴 노멀'(New Normal) 시대로 진입하고 있음.

・'유로존 위기의 장기화 또는 유로존 붕괴 가능성', '미국의 재정문제와 경기침체', '중국과 신흥국가의 성장 둔화와 민간소비 위축', '중동의 정치적 불안정과 국제유가 상승 위험', '기상이변에 따른 국제곡물가 폭등 가능성' 등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불안정 요인들이 도처에서 동시에 발생하고 있음.

・특히 개도국의 수출 시장 역할을 하던 선진국 경제의 소비 기반이 무너지면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동반 추락으로 기존의 경제 상태로 회복은 쉽지 않은 상황임.
‣금융위기 → 재정위기 → 실물경제위기 → 민간소비 위축 → 불황의 장기화

・2013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전년도 3.2%보다 약간 높은 3.4%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음. 하지만 세계 경제의 중심(미국, 유럽)을 강타한 경제위기의 충격과 구조적 취약성이 그대로 남아 있어 '양극화 확대', '고용기반 붕괴', '중산층 퇴조', '재정긴축과 사회갈등', '고령화 가속화' 등이 주요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음.

- 초국적 협력을 통한 위기 극복 노력 대신 국가 간 갈등만 증폭되고 있음

・지난해 주요 국가들이 선거(러시아 3월, 멕시코 7월, 미국 11월, 일본 12월, 한국 12월 등)를 통해 새롭게 지도부를 구성한 후 올해 본격적으로 체제 안정화를 위한 조치와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에 매진할 전망임.

・하지만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조치가 국가부채를 더욱 높이는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실재로 2009년에서 2012년 사이 GDP 대비 국가부채 비중이 미국(89.7% → 107.2%), 일본(210.2% → 236.6%), 유로지역(80.0% → 93.6%) 모두에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자국의 경제위기 극복을 우선으로 내세운 국가들 간의 패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그만큼 세계 전체가 당면한 공동의 위기에 대해 협력적 대응보다는 각자 생존에 치중한 결과 국가 간 긴장과 갈등이 고조됨으로써, 결국 그 부담이 경제, 정치, 군사적으로 힘이 약한 국가들로 쏠릴 가능성이 높음.

・지정학적 불안정성과 정치적 갈등, 이상기후 등으로 국제 유가 및 곡물가가 급등할 경우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이처럼 세계적인 차원에서 위험의 확산과 전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국가 단위의 이해관계를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문제 해결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런 가운데 협력과 조정의 매개자로서 세계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함. 하지만 고실업, 양극화를 동반하는 저성장 체제가 지속되면서 사회적 불균형과 갈등이 심화될 경우 이를 빌미로 국가의 개입과 관리 영역이 강화,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역할의 중요성에 비해 시민사회는 오히려 더욱 위축될 수 있음.

- 치열한 다자간 경쟁과 갈등이 특히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음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오바마가 재집권한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시진핑 5세대 지도부로 교체한 중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추진하는 등 미국과 중국이 서로 다른 경제협력 체제를 가지고 아시아 지역에서 경쟁하고 있음. 특히 미국은 재정적자의 어려움을 중국과의 무역불균형 개선을 통해 해소하려 하고 있어 중국과의 통상 분쟁이 격화되고 있음.

・여기에다 중심축을 아시아로 이동시키고 있는 미국과 지역 패권을 노리는 중국은 경제・통상 분야는 물론 정치・군사 분야로까지 패권 경쟁을 확대하여 동북아 지역 전체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음.

・또한 남중국해 난사군도, 동중국해 센카쿠열도, 러시아 쿠릴열도, 동해 독도 등 동북아 지역에서 자원 확보를 둘러싼 갈등이 외교적 마찰을 넘어 영토분쟁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음.

- 위기 극복을 위해 상호 견제와 갈등을 넘어설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이 필요

・G2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세계적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리더십 전체를 약화시키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오랜 경기침체와 대지진에 따른 재해로부터 신속하게 벗어나고자 하는 일본은 아베 정권을 중심으로 우경화를 통한 강한 일본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헌법(평화헌법)[2] 개정을 통한 군국주의 추구와 강성외교 조치는 동북아 지역에서 긴장을 확대시키고 있음.

・여기에다 북한 김정은 체제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3차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정치 군사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미국, 일본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북한의 극단적 선택을 막고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야 하는 복합적인 과제를 안고 있음. 결국 갈등과 위기 상황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복잡한 대외관계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전에 대한 공감과 참여의 확대로 아래에서부터 사회적 리더십과 구심력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음.

● 주요 국가들의 2013년 경제 전망과 영향

- 미국: 규모와 역할 면에서 세계 1위로 여전히 세계경제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으나 글로벌 경제위기의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2011년 기준 GDP가 15조 달러로 2위 중국보다 2배가 넘는 규모를 가지고 있으나, 8% 대의 높은 실업률에다 중산층의 자산 기반인 주택가격 폭락에 따른 충격이 여전히 진행 중임.

‣ 미국 주택 평균가격이 2007년 11만 달러에서 2010년 7만5천 달러로 42% 하락

・경제적 활력을 높이기 위한 경기부양과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긴축재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딜레마 상황(재정절벽)에 직면해 있음.

・재정지출 감축이 자본의 유동성과 민간소비를 위축시켜 경기 침체를 지속시키는 가운데, 미국 경제의 회복을 위한 오바마노믹스 2.0의 추진으로 한편으로 FTA를 확대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워 통상 마찰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음.

2) 개헌을 위해서는 중의원과 참의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고 국민투표에 붙여 50%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일본 자민당과 일본 유신회 등을 합한 중의원 의석수가 3분의 2 이상이며, 올해 7월 참의원 선거에서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하면 헌법 개정안을 제출할 가능성이 높음.

- **중국:** 2010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자리매김한 이후 세계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왔으나 최근에 속도조절 국면에 들어감.

・탈냉전 후 지난 20년간 세계 성장률 3배에 달하는 10%대의 고도성장 체제를 유지해오던 중국이 작년에 수출 증가세의 급속한 둔화와 함께 1999년 이후 처음으로 '최소 8% 성장'(일명 바오바(保八) 정책) 목표를 포기하기에 이름.
  ‣ 수출증가율 감소추세: 31%(2010년) → 20%(2011년) → 7%(2012년 상반기)

・저임금에 따른 가격경쟁력으로 수출을 주도하던 성장전략은 수출대상 선진국가들(미국, 유로존 등)의 경제위기와 임금상승, 위안화 절상 등으로 한계를 맞게 됨.

・소득수준 향상과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 증대로 권위적인 통치방식에 대한 저항감이 높아지고, 사회 양극화의 확대에 따른 갈등이 확산됨에 따라 정부의 정책 기조를 '국강'(國强)에서 '민부'(民富)로 전환시킴.

・한편 내륙 지역에 대한 인프라 투자와 소비세 인하 등의 경기부양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규모 부양책이 투자 과열에 따른 물가상승과 주택가격 폭등 등 거품을 확대시킬 우려도 있음.

・중국 경제성장의 둔화와 함께 중국 내수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는 중국을 제1교역국으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대중 수출의존도 24%) 경제에 적지않은 부담을 줄 전망임.

- **일본:** 세계 3위 경제대국으로 대지진 이후 내수경제가 잠깐 활성화되는 듯 했으나 다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일본은 우리나라의 3번째 수출국이자 2번째 수입국으로, 일본의 경기 침체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

・잃어버린 20년을 극복하고 새로운 활로를 찾으려던 일본은 고령화와 대지진, GDP의 2배에 이르는 국가부채 등 내부문제까지 겹쳐 성장의 활력을 잃고 있음. 여기에다 민간의 가계소득은 점점 낮아져, 정부의 민간에 대한 추가 부담 요구도 쉽지 않은 상태임.
  ‣ 일본의 가구당 평균소득이 1994년(664만2천엔)에서 2010년(538만엔) 사이 19% 감소함

・세계적인 경기침체 상황에서 일본은 최근 들어 적극적인 엔低 정책으로 새롭게 활력을 도모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이것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음.

・한편, 일본 사회가 지난 20년간 장기 침체 상황을 거쳐 오면서 축적된 경험들이 많아 다른 여타의 국가들 보다 장기 저성장 국면에 대한 적응력이 높을 것으로 평가되는 부분도 있음.

- **유럽국가(유로존):** 세계경제의 15%를 차지하는 유럽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면서 세계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음.

・2010년 초부터 시작된 경제위기가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까지 흔들면서 침체국면이 지속되고 있음.

・2012년 8월 기준으로 유로존 실업률은 11.4%임. 특히 위기상황을 직접 경험한 국가들의 실업률이 높음(그리스 24%, 스페인 25% 수준)

・이탈리아, 스페인 등 재정위기 국가들의 만기도래 국채규모가 총 5127억 유로(GDP 대비 15.8% 수준)로 채무상환 부담 압력이 증가하면서 위기 상황이 지속될 전망임.

・금융위기와 재정위기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위기 상황이 복잡한 데다 유로존 국가들의 상황과 처지가 서로 달라 비용(고통) 분담을 포함한 문제해결에 대한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임.

・위기 극복을 위한 세금인상, 실업수당 및 연금지급 축소 등 정부의 긴축조치는 사회적 갈등을 촉발하고 내수 부진을 가져와 경제적 활력을 찾는 데 상당 기간 시간이 걸릴 전망임.

장기 저성장 시대의 새로운 변화와 도전

● 저성장 시대의 장기화 가능성과 새로운 과제들

- '수출', '소비', '투자'의 총체적 부진에 따른 우리나라 경제의 장기 침체 가능성

・선진국의 저성장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원화가치 상승 등으로 '수출'이 부진한 상황임. 특히 최근에는 원高 엔低 현상이 확대되면서 수출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국내 경제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음.

・부동산 시장 침체와 주택가격 폭락에 따른 자산가치 감소로 가계부채가 악화되어 '소비'가 침체되고 있음. 특히 1천조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가계부채 중 주택대출이 절반(42.5%)가량 차지하고 있음.

・주택경기 침체는 가계부채에 대한 상환 압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저금리에 따른 경영악화를 겪는 금융권들이 저신용 대출을 제한시킴으로써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전망임.

・저성장에 따른 세수 부족과 복지 분야에 대한 재정지출 증대로 정부의 경기부양 여력은 약화되고, 자금사정 악화로 투자가 위축된 부실기업들은 퇴출 위기로 내몰리게 됨.

・결국, V자 또는 U자형으로 단기간에 회복가능 했던 지난 몇 차례의 위기(1997년 외환위기, 2003년 신용카드 사태,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와는 달리, 지금은 L자형으로 저성장 체제가 장기화, 구조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이런 가운데 경기회복을 명분으로 한 불건전 자본들(해외 투기자본, 카지노자본 등)이 유입되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잠식시킬 가능성마저 나타나고 있음.

- 2013년 한국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비관적 전망

・유로존 재정위기와 미국의 재정긴축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2013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지속적으로 낮추어 발표하고 있음.

‣ 2013년 전망치를 작년 10월 3.2%, 12월 3.0%로 발표했다가 최근에 다시 2.8%로 수정해서 발표함

‣ 작년의 경제성장율 전망도 초기 3.5%에서 3%, 2.4%로 낮췄으나 결국 2%로 마감한 바 있음.

・이처럼 당면한 경제위기와 그에 따른 불확실성은 기존의 경제 진단과 분석의 틀 자체를 무력화 시키고 있으며, 경제성장율 지표 자체도 현실의 문제를 제대로 반

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3] 대다수의 사람들이 올해 2013년 한국 경제가 '작년과 비슷'(46%)하거나 '더 어려워질 것'(40%)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더 나아질 것'(12%)으로 대답한 응답자는 소수로 나타났음.

・저소득층은 고용불안으로, 고소득층은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가치 하락과 부채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사회계층 전체가 경제적 불확실성에 따른 위축된 심리상태를 보이고 있음.

- 경쟁과 양극화의 확대 속에서 풀뿌리 생활경제의 어려움은 가중될 전망

・경기 침체 속에 사회경제적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음. 소득계층 상위 1%가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반면, 생활비 충당을 위해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또한 증가하고 있음.

・특히 가계부채가 1천조 원에 달하는 상태에서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소위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 같은 새로운 사회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급속한 고령화 추세 속에 노후 준비가 부족한 세대들이 늘어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소비 심리는 위축되고 생계형 일자리에 대한 욕구는 크게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은퇴한 베이비부머(1955~1963년 사이 출생) 세대와 구직이 어려운 청년세대가 자영업으로 몰리면서 자영업 시장에서 생존 경쟁은 심화되고 있음. 그 결과 자영업자들 가운데 수익성 감소에 따른 폐업과 이로 인한 가족공동체의 붕괴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자영업자의 금융부채 비율이 159.2%로 전체 평균 109.6%보다 높게 나타남

  ‣ 500만이 넘는 자영업자들 중 절반에 가까운 47%가 3년 안에 휴업이나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전체 가구의 27%를 차지하는 자영업자들의 부실과 도산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과 골목상권 침투를 규제하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것을 회피하기 위한 자본의 전략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정부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해 영업시간제한(밤12시~오전10시), 의무휴무제(월2회 일요일 혹은 공휴일), 사전입점예고제 등의 규제를 실시하고, 편의점에는 신규 출점거리제한(250m) 조치를 취함

  ‣ 하지만 대형 유통업계는 규제를 피해 프랜차이즈 형태로 골목상권에 적극 진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규제의 사각지대를 찾아 의약품과 화장품, 생활용품, 식품 등을 모두 취급하는 복합점포 '드럭스토어'(Drug Store)를 가지고 골목상권에 진출할 준비를 하고 있음.

3) 한국갤럽이 2012년 11월 15일부터 30일까지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한국소비자연대뉴스 2013.1.2.참조)

● 경기 침체와 위축이 만들어 낸 인식과 태도의 변화

- 저성장 시대의 생활양식 변화

・지속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을 때는 자기개발과 혁신을 통해 개인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집중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저성장 시대를 맞아 사회경제적 활력이 떨어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면서부터는 치열한 속도와 경쟁의 굴레에서 벗어나 휴식과 치유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음.

・단순 소박한 삶을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과 행복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힐링'(healing)이 대중적으로 주목받고, 명상, 템플스테이, 캠핑, 아웃도어, 생활체육, 등산, 자전거, 귀농, 도시텃밭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음. 힐링은 지난 한 해 동안 방송과 강연(콘서트), 출판, 영화계를 움직인 핵심 키워드 중 하나로서, 개인 차원의 심리적 치유로서 의미를 넘어서 정치, 제도적인 변화를 통해 사회적인 치유를 이끌어내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음.

・한편 경쟁에 지치고 소외와 단절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가족과 이웃 등 친밀관계를 통해 공동체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음. 가족주의의 부활과 함께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소통 및 접촉이 다면화 되고 있음.

- 저성장 시대의 소비패턴 변화

・경제적 불황기를 맞아 가격과 품질을 함께 비교하면서 다양한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선택적 소비'가 더욱 확대되고 있음. 즉 필수 소비재는 근검절약형 소비로 저가를 찾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 가격보다 가치를 우선하는 선택적 소비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 이것은 불황에도 의미를 두는 품목에는 지출을 아끼지 않는 가치소비가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는 것임.

・이와 함께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고, 중저가, 저용량, 소포장 제품을 선호하는 불황형 소비패턴이 확산될 전망임. 백화점 매출이 감소하고 할인행사에 소비자들이 몰리는가 하면, 오프라인 매장에서 눈으로 물건을 확인한 뒤, 실제 구매는 온라인에서 가격비교를 통해 저렴하게 구입하는 소비형태 즉 쇼루밍(showrooming) 현상이 확산될 전망임. 쇼루밍은 제품을 미리 직접 확인하려는 욕구와 저렴하게 구매하려는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려는 것으로, 오프라인 매장이 전시실(showroom) 역할을 한다는 것임.

・한편 이런 변화된 소비행태에 대응해 기업들도 초저가 세일을 기획하거나 세일기간을 세분화해서 지속적인 소비를 만들어 내거나, 온-오프 통합형 판매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농업·먹거리에 대한 근본 대책의 필요성

● 점점 더 현실화 되고 있는 세계 식량문제

- 세계 식량생산 기반이 갈수록 불안정해지고 곡물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음

· **이상기후:** 작년 기상상태와 작황의 악화로 곡물가가 급상승하여 2008년 곡물파동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 이에 따라 곡물 비축량이 줄어들어 올해 기후변화에 따른 작황 상황에 따라 가격 급등 가능성이 더욱 커짐.

· **국제곡물시장의 구조:** 국제곡물 시장에서 교역량은 생산량의 15% 수준으로 생산량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이 상대적으로 큰 구조를 가지고 있음.

· **투기자본의 곡물시장 개입:** 저성장 기조 하에 각 국가들이 저금리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유동성 자금(선물투기)이 곡물시장으로 들어와 가격 폭등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음.

· **자원민족주의 등장:** 식량위기가 가시화 되면서 주요 식량수출국들을 중심으로 곡물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가 구체화 될 전망. 이미 중국,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 주요 곡물수출국들의 수출제한 조치로 곡물수입국들이 심각한 곤란을 겪은 바 있음.

- 올해 세계 식량생산에 대한 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임

· **밀:** 주요 생산국(러시아, 아르헨티나, 호주)들의 생산량 감소로 전년대비 생산량은 6.4%, 재고량은 12.0%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옥수수:** 미국 중서부에 불어 닥친 가뭄 영향으로 생산량은 4.6%, 재고율은 13.8% 감소해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대두:** 남미 지역의 재배면적 증가와 미국의 작황 호전으로 생산량은 11.9%, 재고량은 7.2%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쌀:** 생산량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는 대신 재고량은 3.4%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

● 농업과 먹거리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과 대책 마련이 필요

- 2013년 우리나라 농업 전망과 과제들[4)]

· **농가소득 감소:** 2013년 농업총소득은 9조 8,950억원으로 전년 대비 0.1% 감소할

4) 농촌경제연구원, 2013, <농업전망 2013 Ⅱ>, 제16회 농업전망 자료집(E04-2013) 참조.

것으로 전망.

- **농가간 및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 농가간 소득격차가 12배 이상으로 나타나 도시 근로자 가구에 비해 소득불균형이 매우 높음. 도·농간 소득격차도 2008년 65.2%에서 2011년 59.1%로 나타났고, 점차 확대되는 추세임.
- **농가인구 감소와 농촌 고령화 확대:** 도시민들의 귀농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농가인구는 계속 감소 추세로, 2013년 농가인구는 전년보다 2.2% 감소한 283만명 수준을 전망.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 또한 2012년 34.7%에서 2022년 43.5%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경지 면적 및 이용율 감소:** 생산의 기반인 경지면적은 2013년에 전년 대비 0.5% 감소하고, 경지이용률도 계속해서 감소추세를 보임.

- 농업의 미래를 위협하는 환경 변화들

- 경제정책 기조가 저성장 위기 극복에 맞춰짐으로써 수출확대와 물가안정 등을 이유로 농업개방을 더욱 가속화 할 가능성이 높음.
- 이런 가운데 경기침체와 재정악화 등을 이유로 농업 개방에 따른 피해복구 및 지원 노력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음.
- 2013년 국제 유가 및 농자재(종자,비료,농약 등) 가격은 경기침체 영향으로 전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하락할 전망임. 그러나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폭등과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생산 피해의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임.
- 한편, 현행 15% 수준의 종자 자급율을 높이고 나아가 종자를 수출상품화 하는 정책(Golden Seed Project)을 본격 추진하면서 종자 개발과 작물재배 분야에 GMO 기술이 적극 도입·적용될 가능성이 높음.

- 정치적으로도 소외되고 있는 농업문제

- 식량위기가 세계적인 문제로 등장했지만 지난 18대 대선 과정에서 '농업' 의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관심 밖으로 밀려났던 현실이 말해주듯이, 우리나라에서 농업은 정치적으로도 배제된 상태에 놓여 있음.
- 농민 수가 3백만 이하로 줄어들어 유권자로서 영향력도 약화된 상태인 데다, 농민을 대변할 조직과 리더십도 부재한 실정임. 이런 가운데 농촌 유권자의 65%가 농업정책 실패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여권을 지지하고 있음.
- 그동안 정부는 국내 식량자급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물가 조정 차원에서 수입 농산물로 국내산 농산물 가격을 낮춰 왔고, 곡물자주율이라는 새로운 목표치를 앞세워 해외농업개발에 나서왔음. 그 결과 2011년 곡물자급률은 22.6%

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자급률 100%를 웃돌던 쌀도 83%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결국 식량위기 시대를 극복해나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상업농', '산업농', '기업농', '개방농' 정책의 흐름에서 과감히 벗어나 농지를 지키고 '소농', '가족농', '친환경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양극화와 안전 문제가 농업과 먹거리 분야의 현안으로 등장

- 먹거리 분야에서 사회 경제적 양극화가 구체적으로 체감되고 있음

・경기침체 속에 가계 소비지출 분야에서 '식생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음. 우리나라 식품물가(식료품+비주류음료) 상승률이 OECD국가의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으며, 특히 저소득층 가구의 엥겔계수(소비지출 중 식료품과 비주류음료가 차지하는 비율)가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함.

・2012년에 실시한 서울, 고양파주, 성남용인 등 수도권 거주 한살림 조합원에 대한 의식조사에서도 절반 가까운 사람들(47.8%)이 경기침체로 인해 식비지출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함. 응답자들은 소비형태의 구체적인 변화로 '소포장 상품 선호'(23.0%), '외식횟수 감소'(22.9%), '장보기 횟수 감소'(21.9%), '가격할인 행사 선호'(17.0%) 등을 들었음.

・물론, 한살림 물품 구입을 줄였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10.7%로 나타나, 대다수 조합원들은 경기침체로 인해 소비지출에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여전히 먹거리에 있어서는 가격보다 품질과 안전성을 더 중요시하는 선택적 소비의 특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됨.

- 먹거리 안전 문제가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로 등장하고 있음

・ '멜라민·광우병'(2008년), '생수발암물질'(2009년),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발병'(2010년), '방사능오염'(2011년), '벤조피렌 사건, 비소쌀 사건'(2012년) 등 최근 들어 더욱 잦아지고 있는 식품오염 사고로 시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것이 현실임.

・식품의 대량 조리·유통과 외식 소비가 증가하고 수입 가공식품이 늘어나고 있는데다 GMO나 나노기술 등을 활용한 신생 식품들이 등장하면서 먹거리 안전성 문제는 앞으로도 더욱 심각해질 전망임.

・시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정부 차원에서도 해썹(HACCP) 등 식품 안전 인증제도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확대 등 다양한 조치들이 진행되어 왔음.

· 이런 현실을 반영해 새로 출범할 박근혜 정부는 '불량식품 추방'을 통한 먹거리 안전을 주요 정책과제로 채택해 추진할 전망임. 이에 따라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시켜 국민 먹거리의 안전 관리를 총괄하도록 함.

· 물론 이에 대해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의 생산과 가공, 유통, 소비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는 만큼, 농업관련 부처가 식품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으나 반영되지는 못함.

· 또한, 먹거리 안전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반가운 일이지만 정부가 감시자, 규제자로 직접 나설 경우 민간 자율의 영역에서 상호 신뢰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고자 했던 노력들은 오히려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 특히 안전성 기준을 강화하고 제도적인 규제를 확대할 경우 상당한 자본과 기술력을 갖춘 대형 식품유통업체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식품업체의 92%를 차지하는 10인 이하 영세업체들의 경영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음.

· 따라서 직거래 방식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 소비하는 활동을 해 온 생협의 경험들을 적극적으로 사회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으며, 생협이 축적해 온 사업과 운영 경험들을 바탕으로 농산물 생산 및 가공 관련 사업들을 협동조합 방식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정부 정책과 시장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나가야 할 것임.

● 친환경 유기농산물 시장을 둘러싼 변화와 영향

- 농식품 시장의 대형화, 규모화 추세와 생존 위기에 내몰리는 영세 업체

· 전체 농식품 시장에서 BIG 3 대형마트업체(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의 시장점유율이 2007년 66%에서 2012년 75% 수준으로 계속 높아져 옴. 대형마트들은 정부 규제를 피해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시장 점유율을 계속 확대해 나갈 전망임.

· 소비지 유통시장이 대형화됨에 따라 생산지 농식품 공급채널도 규모화 하고 있음. 이처럼 생산과 유통 전반을 아우르는 규모화 추세가 물량의 안정적 공급과 품질관리 개선 등의 효과를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영세한 업체는 관련 분야에서 경쟁력을 잃고 퇴출될 가능성도 커짐.

- 경기불황 속에 유기농산물 시장이 주목받으면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음

· 경제가 어렵더라도 먹거리만큼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을 구매하려는 소비심리로 친환경 유기농산물 시장 규모는 계속 확대될 전망임.

▸ 2006년 1조3,000억원 → 2011년 3조9,678억원 → 2015년 5조3,111억원 이상 전망

- 친환경 유기농산물이 틈새시장으로 각광 받으면서 자금력을 갖춘 대기업, 대형 유통자본이 적극 뛰어들어 높은 가격으로 현물 물량을 선점하고 저가 공세로 독점시장을 구축할 가능성이 높아짐.
- 포털사이트 업체 네이버 또한 2013년부터 중소규모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중개하는 지식쇼핑 사업을 시작했으며, 동네 슈퍼마켓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나들가게도 aT센터의 지원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취급하기 시작.
- 이런 가운데 상당한 자금력과 인프라를 갖춘 농협과 지자체들이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시장에서 주요 행위자로 참여하고 있음.
- 신경(信經) 분리 후 도시 농협들의 친환경농산물시장 진출이 적극 모색되고 있음. 농협은 최근 회원으로 가입한 소비자들에게 주문받은 친환경 농산물을 묶어서 1~2주 단위로 안방까지 배달하는 '친환경농산물 택배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함.
- 지자체들은 학교급식을 비롯한 친환경농산물 공급협약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와 유통센터 건립으로 대규모 유통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강원도와 경남도는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남은 경남권 소비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농식품부와 지난해에 경기도 광주시에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를 건립한 데 이어 제2, 제3 유통센터를 계획 중임.
- 유기가공식품 구매에 대한 조사에서 주요 구입처로 대형 할인마트(39.3%), 전문매장(16.7%), 직거래단체(13.3%), 백화점(10.2%) 순으로 나타났으며,[5] 수도권 지역 한살림 조합원들의 유기농산물 구입처에 대한 조사에서도 아래와 같이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음.[6]

구분	대형 할인 마트	유기농 전문점	농협 하나로 마트	백화점	다른 생협	동네 슈퍼	생산자 직거래	재래 시장	기 타	계
%	40.7	28.9	27.6	20.6	13.4	10.4	8.5	6.1	3.2	115.0
(빈도)	(723)	(513)	(490)	(366)	(237)	(184)	(150)	(108)	(57)	(1175)

- 온·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한 경로로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 된 가운데 소비자들의 선택을 둘러싸고 친환경농산물 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임.

5) 정학균・장정경, 2011, "유기가공식품의 소비실태분석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 참조.
6) 2012년에 수도권 지역(서울, 고양파주, 성남용인) 한살림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 결과 참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천 방향과 과제

● 비상한 각오로 발상을 전환하고 체질을 바꿔내는 노력이 필요

- 급속한 변화와 충격에 특히 취약한 한국사회의 현실

・압축 성장으로 근대화 과정을 추동해 온 우리나라는 지금처럼 저성장 국면이 지속될 경우 경제, 사회, 환경적으로 특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우리나라는 특정 경제주체(대기업), 특정 국가(미국, 유럽, 중국), 특정 품목(변동성이 큰 IT 등)에 의존해 온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세계경제 전체가 침체되고 불안정해지면서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있음. 2013년 10대 그룹 총수 신년사에서 '위기', '침체', '불황'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인 것으로 알려지듯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중대한 상황에 직면해 있음.

・여기에다 생산 및 소비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식량과 에너지의 대외 의존도 또한 높아서 자연 환경과 시장 가격의 변동이 주는 충격과 영향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음. 특히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가 상위 20%(5분위) 가구 보다 가계지출 구조에서 농산물과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2배가량 높아 유가 및 곡물가의 변동은 특히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을 주고 있음.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은 22.6%로 역대 최저수준인데다, 2012년에 상승한 국제곡물가가 시차를 두고 올 상반기에 국내 음식료품의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줄 전망이며, 올해도 이상기후가 농작물 생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예측이 어려운 상태임.

・에너지 자급률은 3% 수준에 불과한데, 중동 지역의 정치적 불안 요인으로 언제든지 유가가 폭등할 수 있는 상황임. 이란 핵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작년 11월 유엔으로부터 사실상 국가(비회원 옵저버 국가) 지위를 획득한 팔레스타인과 올 1월 총선에서 강경파 네탄냐후 총리가 승리해 재집권하게 된 이스라엘 간의 분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음. 여기에다 시리아 사태가 정부군을 지원하는 러시아, 이란과 반군을 지원하는 미국 등 서방국가들 간의 대리전 양상으로 격화되면서 중동 지역의 불안감을 높이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사회 안전망이 여전히 취약한 우리나라는 경제적 불안정에 따른 부담과 충격을 사회구성원 개인들이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음. 물론 박근혜 정부가 공약을 지켜 가계부채를 완화하고 무상보육,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등 복지정책을 제대로 이행할 경우, 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구매력이 살아나 내수경기를 활성화 시킬 수도 있음.

- 새로운 정부의 권위주의 강화에 따른 우려와 새로운 대안 창출 노력의 필요성

· 새로 출범할 박근혜 정부는 경제와 정치 영역을 엄격히 분리한 채, 한편으로는 경제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국가주도형 성장전략을 적극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경제와 사회 영역 전반에 대한 권위주의적 통치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 박근혜 정부는 경기침체 극복과 일자리 창출 및 복지재원 확충 등을 이유로 경제영역에 대한 관료적 개입을 확대할 것으로 보임. 경제부총리를 부활하고 정부의 권한을 경제부처로 집중시킴은 물론, 지하경제 양성화를 목적으로 국세청 등을 동원해 세원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경제민주화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상생경영, 공생발전, 동반성장 등)을 내세워 재벌, 대기업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FTA의 지속적인 추진과 금융권, 공항, 철도, 전기, 가스, 물 등 기간산업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여 정부가 앞장서서 시장경제의 활로를 열어줄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안전'을 강조한 정부조직 개편(안전행정부, 식품의약안전처 등)과 경찰인력 증원 조치 등에서 보듯이, 박근혜 정부는 법치(法治)를 통해 사회 불안과 갈등 요인들을 관리해 나갈 것으로 보임. 하지만 실질적인 안전 확보는 사후 처방적 조치가 아니라 사전 예방적인 노력에 있다는 점에서, 법과 제도를 통한 규제 방식의 안전관리는 한계가 있음. 먹거리 안전문제 역시 최종 결과물로서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차원을 넘어서 먹거리가 생산되는 환경과 조건, 과정 전반에 대한 예방적 노력이 있을 때 가능할 것임. 이점에서 먹거리 안전을 농업 생산 영역과 분리시켜 식품 관리 차원으로 제한시킬 수 있는 지금의 정부조직 방향에 우려가 제기됨.

·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잘살아보세', '제2새마을운동' 같은 구호가 다시 등장하면서 성장제일주의를 앞세운 개발국가 체제의 모습들이 재확인되고 있음. 하지만 사회와 경제 영역 전반에 대한 국가의 개입 확대는 박근혜 정부 스스로 강조했던 경제민주화의 실현도 어렵게 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국가부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FTA의 적극 추진은 어려워진 농업의 회생 대책을 소홀하게 만들 수 있으며, 경제적 불안정 속에서 민영화 조치로 공공요금이 인상하는 등 서민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임.

· 결국 경제민주화의 실질적 실현은 재벌개혁의 차원을 넘어 정치와 행정 등 사회 전반의 혁신과 함께 시민사회 민간 영역의 자발성과 창조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경제적 모델들을 다양하게 만들어나갈 때 가능할 것임.

● 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과 실천 과제들

- 전환의 영역으로서 사회경제적 완충지대 만들기

· 지금은 정권 교체 또는 시대 교체의 차원을 넘어 문명 전환, 체제에 대한 전환을

모색할 때임. 변화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다가올 미래의 불확실성이 점점 커질수록 '흔들리는 나뭇잎을 보고 불어오는 바람을 알아차리는 지혜'가 필요한 때임.

- 이를 위해 경제적 차원을 넘어 정치 및 이념의 차원으로 확장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와 사회 전 영역(지역, 부문, 세대, 계층)으로 확산되고 있는 갈등 현상을 창조적으로 수용해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완충지대'(buffer zone)을 다양하게 만들어 낼 필요가 있음. 완충지대는 예측 불허 상황이 만들어 낸 혼동을 극복하고, 전환을 준비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롯되는 비용과 고통을 최소화 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혁신적 대안(Innovational Alternative)의 공간으로 의미를 가짐.

-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지탱해 온 지속성장, 동반성장의 신화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면한 위기의 핵심은 오히려 저성장 보다 신뢰의 붕괴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에 있음. 따라서 사회경제적 완충지대를 각 부문과 영역에서 다양하게 만들어 충격과 변화를 흡수하고 공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의 길을 열어갈 필요가 있음. 최근 들어서 사회적경제, 협동조합경제, 공동체경제, 호혜경제, 살림의경제 등 다양한 이름의 대안경제 모델들이 주목받고 있는 것은 자립과 자치에 기반한 새로운 길을 찾으려는 열망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음.

- 공존과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는 생활협동운동의 역할과 과제

- 승자독식의 경쟁체제가 만들어 내는 불안감과 피로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저성장 시대의 등장은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상호 협력을 통한 공존의 방식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여주고 있음. 최근 들어 마을공동체와 협동조합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부쩍 높아진 이유도 여기에 있음.

- 특히 경기침체와 양극화, 공동체 해체 등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생활협동조합에 대한 관심과 기대도 커지고 있음. 생활협동조합은 오늘날 우리사회의 생활 현장과 맞닿은 가장 대표적인 대중운동 조직체로서, 먹거리를 비롯한 생활의 기본 소재를 가지고 이윤과 경쟁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와는 다른 신뢰와 협동의 새로운 경제 영역을 만들어 왔음.

- 생활협동조합은 최근 일어나고 있는 '협동조합 붐' 현상 속에서 대표적인 협동조합조직으로 주목받고 있음. 하지만 협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관심 속에 제도적 기반과 지원책들이 활발히 조성되는 것이 생활협동운동에는 기회 못지않게 중대한 도전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

- '사람'보다 '제도'가 앞설 경우 자립과 자치를 바탕으로 한 협동운동의 기본정신이 제대로 성장하고 뿌리내리기 어려울 것임. 특히 경제위기와 국가재정의 부실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과 '복지' 문제를 시민사회 민간 영역으로 책임전가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이 우리의 현실인 만큼, 생활협동운동은 스스로의 가치와

정체성을 확고히 하여 제도화가 만들어 낸 다양한 변화들을 활용하되 중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급속한 상황 변화에 신속,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역량 강화와 체계 마련.
  - 조사·분석 기능 강화로 사회 환경의 변화와 이것이 조합원과 일반시민(예비조합원)의 인식과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조합원의 기대를 사업과 활동, 조직 운영 전반에 효과적으로 수렴해 반영시킴
  - 조직문화 개선과 책임과 권한의 명확한 구분 및 위임으로 운영의 경직성을 탈피하여 참여 주체들의 자발적 동기를 불러일으킴
  - 교육, 연수, 홍보 분야의 내용 및 기능적 통합성을 높여 조직의 비전과 가치의 토대를 단단히 하고 이를 통해 각 지역과 부문, 영역별 사업과 활동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조직 전반의 창조적인 문제해결 역량을 높임

- 생활협동조합의 사업과 활동의 기초 토대를 강화하여 지속가능성을 실현해 나감.
  - 사업 측면: 토대 강화를 위해 생산 안정화와 물품 수급 효율화, 전략품목 개발, 클레임 방지, 구매력 결집과 물품 이용율 향상, 그리고 복지와 돌봄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동사업체를 발굴하고 실현하는 노력 등
  - 활동 측면: 조합원이 참여하는 기초조직(마을모임, 소모임, 위원회 등) 활동 활성화, 조직과 현장 간의 소통 체계 강화, 지역사회 다양한 파트너들과의 협력관계 구축으로 활동의 시너지 효과 창출 등

- 대안적 경제와 생활양식을 실현하는 창조적인 주체로서 조합원의 역할 확대
  - 쏟아지는 정보와 자극의 홍수 속에 무감각해 진 콘크리트화 된 소비자에서 벗어나 직접 경험하고 판단하고 현명하게 선택하는 주체화 된 소비자로서 역할을 확대할 필요. '질 좋은 제품을, 저렴하고, 편리하게' 구매하던 데서 한걸음 더 나아가 '기분 좋고, 의미 있게' 구매하려는 욕구를 창조적인 영역으로 발전시킬 필요
  - 생활협동조합의 사업과 조직 활동은 물론 사회실천 분야에도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가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보공개와 일상적 소통 확대 및 조합원 교육 등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

2013년 지구촌과 한국의 사회운동

총체적 전환기, 한국 생명운동의 시대적 과제

- 2013년 한국형 문명전환운동의 원년을 꿈꾸며

> *"근본적인 변혁은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 첫 번째는 위기를 맞아 낡은 옛 것을 떼어내는 과정이며, 세 번째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두 번째 그 사이의 국면, 즉 '이행의 시간'은 따라서 매우 긴장감이 넘친다. 이런 한계 영역에서는 낡은 것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으며, 새것은 아직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어느 것도 작동하지 않는 불확실성의 국면이며 통제불능의 국면이다. 또 우리가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낡은 세계상과 정체성이 해소되어버리는 국면이기도 하다. 우리는 **낡은 것에 대해서는 호스피스 역할**을,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산파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비록 슬픔과 불안 그리고 고통이 동반된다고 하더라도 우주적 시간에서 보면 그 모든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미국의 저명한 생태철학자이자 불교 지도자이며 평화운동가인 조안나 메이시[7]라는 분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전환기'라는 인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 직접적인 역할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낡은 것을 모조리 파괴하고 그 폐허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수명을 다한 질서와 제도는 그 몫을 다했으므로 잘 갈무리해야 합니다. 더불어 새로운 질서를 창조해야 합니다. 그것은 높은 빌딩을 짓는 토목건설이 아닙니다. 나비가 허물을 벗고 날개를 펴듯,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입니다. 2013년 오늘 생명운동은 새로운 문명의 출산을 돕는 '산파'가 되어야 합니다.

대선의 충격, 길을 잃은 한국의 사회운동

"전환의 시대, 생태순환사회로" 2013년 2월 1일 열린 부산환경운동연합 창립 20주년 정기총회장에 내걸린 슬로건입니다. 오랫동안 한국 환경운동을 이끌어왔던 (전국)환경운동연합이 '20주년위원회'를 구성하고 새로운 길을 탐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총회에서 '전환'과 '생태순환사회'라는 화두가 내걸린 것도 새로운 20년을 준비하는 그들의 시대인식과 깊은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운동의 현실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계사년 새해를 맞은

7) 조안나 메이시는 한국에도 엘름(elm)댄스와 재연결(reconnected)이라는 워크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엘름댄스는 체르노빌 참사로 방사능에 피폭당한 느릅나무를 추모하는 춤입니다. 『두려움 없는 미래』(프로네시스, 2010) 라는 인터뷰집에서 나온 이야기 중 일부입니다.

한국의 시민사회운동은 대선 패배의 깊은 충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할 '대선평가회'조차 눈에 띄지 않는 가운데, 2013년 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회는 '멘붕'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단지 무거운 분위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작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신년사에서는 '문명의 전환'을 이야기할 정도로 희망과 미래가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대선 패배를 반성하며 마음을 다잡고 다시 싸우자고 하지만, 울림이 없이 공허할 따름입니다. '2013년 체제론'도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론도 김빠진 맥주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미래가 보이기 않기 때문입니다. 일회적 전투에서의 패배가 아니라 전선 자체가 무너진 셈입니다. 2012년 12월 19일 대통령선거는 진보와 보수, 혹은 좌파와 우파가 1대1 구도로 첨예하게 맞붙은 마지막 전투가 될지도 모릅니다. 구도 자체가 이미 낡은 것이 되었다는 말입니다.(물론 앞으로도 오랫동안 전투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안적 담론과 실천의 비약적 성장과 함께 다자 구도, 복합 구도가 형성될 것입니다.)

찬찬히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짧게 보아도 광주항쟁 이후 30년이 넘었습니다. 민주화와 산업화는 근대화의 두 수레바퀴입니다. 서로 적대적인 듯 보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공존관계였습니다. 서유럽에서 산업혁명과 민주주의혁명이 그러했던 것처럼 근대국가의 형성과정에서 때론 싸우고 협력하며 성장해왔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87년 6월 민주항쟁과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10년 집권을 거치면서 큰 틀에서는 이미 한국형 근대국가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좌/진보도 우/보수와의 공존을 선선히 인정하든지, 전혀 새로운 진보의 길(정확히 말하면 진화와 성숙의 길)을 제시하든지 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진보의 권력 획득을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이라고 강변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식으로 말하면 근대체제는 이미 완성되었고 진보와 보수는 체제 내 권력투쟁을 해온 것입니다.

복지국가 주도권 싸움만으로는 새로운 체제를 말할 수 없습니다. 서구형 복지국가도 전통적인 의미에서는 이미 대부분 이루어진 셈입니다. '진보적 복지국가'와 '보수적 복지국가' 사이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그것을 체제전환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른바 '2013년 체제론' 역시 한반도적 관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그 이상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 낡고 오래된 안경을 벗어야 합니다. 안경을 벗어야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다른 관점으로 세계를 보아야 합니다. 검정색 선글라스로 보는 세상은 흑백 두 개의 세계뿐입니다. 울긋불긋한 봄꽃들의 향연을 만끽할 수 없습니다. 총천연색의 전일적 생명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개벽에 버금가는 지구적 전환기에 즈음하여 국가 중심의 '역사'라는 근대의 발명품마저도 낡은 것이 됩니다. 문명 전환의 관점에서는 '역사적 구조와 체계(historical structures and systems)'마저도 좁디좁은 관견(管見)이 됩니다. 지구생태계의 관점, 생명의 시선, 우주적 공공성으로 오늘 우리의 삶과 사회를 볼 때입니다.

이제 한국의 사회운동은 글로벌 생태위기와 자본주의 체제위기를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속불가능한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당과 노동조합, 학교와 종교기관 등등, 근대적 구조물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주(周)나라 말기에 무너지는 옛 질서를 보며 공자가 정명(正名)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한 시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학교가 학교답지 못하고 정당은 정당답지 못하며 교회가 교회답지 않습니다. 탈학교, 탈정당, 탈도시, 탈종교... 기존의 질서로부터 탈출과 전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문명의 출산을 준비하는 글로벌 전환운동

탈출과 전환의 중심에 '새로운' 시민사회운동이 오롯이 서있습니다. 문명전환의 파동과 에너지는 돈(기업)과 권력(국가)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본원적 생명에너지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회운동 자체가 먼저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미 시민사회운동의 목표 이동 혹은 새로운 차원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권력감시와 기업감시와 환경보호는 여전히 중요합니다만, 동시에 재인간화(신인간)과 새 문명을 모색하는 새로운 차원의 사회운동이 절실합니다. '권력의 교체'가 아니라 '사람의 변화', '문명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사회운동이 필요합니다. 쓰나미가 몰려오는 게 분명하다면 오늘 아침 한 끼의 식사와 마당청소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근본적인 대책도 세워야 할 때입니다.

글로벌 전환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GTI[8]라는 단체는 문명전환기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먼저 사회운동의 전환을 제안합니다.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도 중요합니다만, 근본적이면서도 포괄적인 전망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속불가능한 세계에서 지속가능세계로의 전환, 물신숭배를 넘어 새로운 공동체로의 전환 말입니다. 변화의 과정을 위한 '전일적인 틀(holistic framework)'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가지 지렛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①새로운 비전 ②시스템적 사고 ③새로운 담론의 발전 ④새로운 체제의 파종과 육성 ⑤새로운 지구시민운동의 지원 ⑥시스템적 시민사회조직 전략을 위한 물적 토대의 확보가 그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의 첫 번째는 물론 비전입니다.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어디를 향해 갈 것인가? 비전 찾기는 우리 안의 북극성을 찾아가는 일입니다. GTI와 서유럽 전환운동의 비전은 '인류사적 성숙'과 '지속가능한 세계'입니다. 이를테면 인류는 지금 사춘기 청소년의 질풍노도의 시대를 거쳐 어른이 되어가는 때라고 봅니다. 몸집은 커졌으나 정신은 아직 성숙치 않은 과도기 혹은 '이행기(transition/전환기)'

8) GTI는 Global Transition Initiative의 약자입니다. '지구적 전환계획'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GTInitiative.org)를 참조. 새로운 시민사회단체와 관련된 이야기는 홈페이지에 있는「Civil Society Organizations: Time for Systemic Strategies」라는 글을 참조.

인 것입니다.
영어의 trans는 통과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단절이 아닙니다. 과거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통과하여 새로운 차원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애벌레와 번데기를 통과해야 하듯이 말입니다.
영국의 작은 도시 토트네스의 녹색 전환운동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만, '전환'은 시대적 화두를 넘어 실천적 목표가 되었습니다. 글로벌 전환네트워크[9]의 새로운 키워드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예컨대 이런 것들입니다.

-새로운 검소함과 큰 사회적 관계(The New Austerity and the Big Society)
-집단적 힐링과 사회변화(collective healing and social change)
-생태적 문화적 재지역화(relocalization)
-지역재생 혹은 지역공동체의 생명력 복원(resilient communities)
-탈성장, 혹은 성장 없는 번영
-정상계의 경제(steady state economy)
-거룩한 경제(sacred economy)
-영성적 사회운동(subtle activism, Spiritual practice)
-약탈적 소유에서 생성적 소유로의 전환 등

2011년 가을 전 세계를 강타한 뉴욕의 점령운동은 권력투쟁이 아니었습니다. 정부를 장악하고 기업을 빼앗아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본과 권력의 식민지가 된 공동체와 삶의 공간을 시민의 것으로 되찾아 오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점령하라2.0'은 진정 삶의 전환운동입니다. 사회전환 운동입니다. 월스트리트에서 도시농업을 일구고 예산 삭감으로 사라진 공무원 대신 마을도서관을 되살리는 상호부조와 돌봄의 생활공동체 만들기입니다.

깊고 넓어진 한국의 생명평화운동 : 2012년을 돌아보고 2013년을 내다보며

2012년은 운동의 전환을 천명한 팜플렛 '원주보고서'를 통해 '생명운동'이란 말이 세상에 나온 지 3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한 세대가 지난 셈입니다. 이제 '생명'은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가 되었고, 생명운동이란 말은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보통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명평화운동으로 더욱 깊고 넓어졌습니다.
생명평화운동은 유럽의 생태주의운동에 비견되는 한국적 대안담론과 실천을 축적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생명평화운동은 새로운 세계관과 가치관을 제시했습니다. 인권과 생태를 아우르며 또 더욱 깊게 하였습니다. 또한 생명평화운동은 사회운동의 새 지평을 열었습니다. 편익적 협동조합을 넘어서는 도농상생, 생산-소비 공동참여의

9) 토트네스를 비롯한 지구적 전환네트워크에 대해서는 http://www.transitionnetwork.org/를 참조.

새로운 협동운동 모델을 만들어내었고, 탁발순례와 삼보일배 등을 통해 성찰과 영성의 사회운동을 창조해냈습니다. 이제 생명평화운동은 마을-지역을 기반으로 협동과 호혜의 사회경제적 시스템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2012년 생명평화는 노동운동을 비롯해 기존 사회운동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5일 제주 강정마을에서 출발한 '2012 생명평화대행진' 행진단이 전국을 순례하고 "함께 살자"는 구호와 함께 29일 만인 11월 2일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참여연대와 생명평화결사가 함께 걷고 함께 노래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쌍용차 노동자들을 위해서 도법스님과 종교인들이 33인 회의를 조직하고 매주 토요일 오후 생명살림국민행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2012년 생명평화는 민주시민교육의 핵심가치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준국가기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시민교육의 교재로 '생명평화세상만들기'(가제)를 만들었고 시험용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생명평화운동이 사회적 시민권을 얻은 셈입니다.

2013년에도 여러 가지 새로운 일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먼저 눈에 띠는 것은 성찰과 깨달음에 기반한 사회운동의 실천입니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가 1000일 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평화의 등불, 당신이 밝힙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한 사람이 한 시간씩 매일 24시간을 1000일간 이어가는 릴레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서유럽 대안운동에서 이야기하는 '서틀액티비즘[10]'의 한국적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3년은 특별한 해입니다. 한국전쟁을 중단시킨 정전협정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국현대사에서도 그렇지만, 문명전환의 관점에서도 한 갑자(甲子) 60년은 의미심장합니다. 정전 60년이 지난 오늘 전쟁의 종식을 기념하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켜야 하겠습니다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체제대립과 이념대립을 넘어서 인간을 비롯한 온 생명이 평화로운 세상을 만방에 선언하고 실천할 때입니다. 한반도의 허리를 가르는 휴전선에서 지구적 문명전환운동의 또 다른 시발점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DMZ평화생명동산과 생명평화결사를 비롯한 생명평화운동 단체들의 특별한 기획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이 민회운동입니다. 민회(民會)는 그리스 아테네의 아고라민주주의의 시민총회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만, 20여년 전 1994년에 출범한 생명민회의 기억이 새롭습니다. 민회는 직접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에 기초해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열망을 모아가는 대안적 공론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민회를 씨줄로, 각 영역의 의제를 담아내는 평화

10) subtle activism은 '정묘한 행동'으로 직역할 수 있으나 부족합니다. 풀어 설명하면 집단적인 명상, 기도, 종교의식 등을 통해 사회적 의식(意識)의 변화, 사회적 기운의 변화를 꾀하는 실천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민회, 생명민회, 통일민회 등의 날줄을 교직하는 깊고 넓은 민회운동의 여정을 구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화문화아카데미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올해는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기 한해 전 보은취회가 열린 지 두 갑자, 12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1893년 4월 충북 보은에 수만명의 동학도인이 모여 포덕천하와 보국안민, 제폭구민, 척양척왜의 깃발을 올렸습니다.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민중들 스스로가 자신의 정치 사회적 염원을 집단적으로 표출한 한국적 민회의 원형입니다. 120년이 지난 오늘 보국안민과 척양척왜를 넘어, 문명전환의 열망을 모으고 표현하는 마당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명평화운동에 대한 사회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협동조합과 대안경제에서의 생명운동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식량위기시대를 예비하는 생명운동의 몫은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쪽의 핵발전소와 북쪽의 핵무기 위협 속에서 핵없는 세상을 위해 생명평화운동이 더욱 앞장서야 합니다. 생명평화운동은 날로 넓어지고 깊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회운동의 패러다임을 창조하는 생명평화운동

오늘 한국의 사회운동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가치, 주체, 방법(전략) 등에서 전면적인 전환이 절실합니다. 지난 30여 년간의 생명평화운동의 전개과정과 2008년 촛불집회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엿볼 수 있으나 아직은 생성 중입니다. 협동, 지역, 공동체, 성찰, 영성, 자치, 농업 등 대안적 키워드와 실천을 통해 새로운 사회운동을 촉매해온 생명평화운동이 이제 한국 사회운동의 새 길을 열어야 합니다. 전환의 기획을 구체화할 때가 왔습니다.
한국 사회운동은 이제 권익민주주의와 이익단체의 논리를 넘어서야 합니다. 사회적 공공성을 회복하고, 나아가 생태적 공공성과 우주적 공공성으로 깊고 넓어져야 합니다. 삶에 천착하되 동시에 삶을 초월해야 합니다. 깨달음과 영성의 사회운동에 주목해야 합니다. 문명전환의 전망을 통찰해야 합니다.

1960년대 이후 한국의 사회운동은 몇 단계 변화의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196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를 '대항(저항)형 사회운동'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면, 1990년대와 2000년대 중반까지는 '대변형 사회운동'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중반 이후 생명평화운동과 다양한 형태의 풀뿌리운동과 함께 '대안형 사회운동'이 비온 뒤 죽순처럼 성장하였습니다. 사회운동의 진화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일단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봅니다.
첫째 주체의 전환. 계급 주체에서 보편적 인간으로, 나아가 인간주체에서 생태계를 포함하는 생명주체로 확장됩니다. 여성, 어린이, 청년, 노인 등 산업화와 민주화의

변방에 있던 생활인들이 새로운 사회운동의 중심이 됩니다.
둘째 가치의 전환. 중심가치와 지향이 바뀝니다. 예컨대 지금까지는 자유와 평등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박애(형제애/사랑)가 새롭게 조명됩니다. 경제가치에서 생명가치로, 성장에서 성숙으로 가치의 중심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세계관과 철학의 전환이 절실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운동은 표면은 바뀐 듯 하지만 심층(잠재의식)은 80년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셋째 운동방식의 전환. 남을 바꾸어 세상을 바꾸는 운동에서 나를 변화시켜 나와 우리를 바꾸고 결국 세상을 바꾸는 운동이 그것입니다. 만들어놓고 짜맞추는 사회운동에서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운동입니다. 이를테면 '구조기획'에서 '과정기획'으로의 전환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운동의 전환은 새로운 에너지의 발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요컨대 생명운동의 힘은 바로 깨달음 혹은 통찰, 혹은 깊은 내면의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서 나옵니다. 자본주의는 경쟁과 기술혁신에서, 사회주의는 생산관계의 모순과 투쟁에서 변화의 동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생명운동의 에너지원은 깨달음과 영성입니다. 기존 사회운동의 의식화가 사회·계급·역사적 의식화였다면, 새로운 사회운동의 의식화(정확히 말하면 '깨달음')는 천지인과 영지체(靈知體, spirit-mind-body)를 관통하는 전일적 각성입니다. 보이지 않는 파동과 에너지와 관계성을 느끼고 알아차립니다. 몸에서 비롯되고 의식과 무의식을 망라하는 전체로써의 정신성이 생명운동의 힘입니다.
새로운 사회운동은 전복이 아니라 중심 이동입니다.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 일입니다. 기존 질서의 전복과 새로운 권력의 창출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변화를 꿈꿉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행동이 변화하고, 어느 순간 되돌아보니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겉으로는 반대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깊어지고 넓어지는 과정입니다. 삶이 바뀌고 뿌리가 깊어져야 '생명의 숲'입니다.

다시 생각해 봅니다. 새로운 사회운동은 새로운 공동체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딴 살림에서 한 살림으로, 함께 살기, 더불어 살기, 서로 살리기 입니다. 인간과 인간의 분리, 인간과 자연의 분리, 인간과 자기 내면의 분리를 넘어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비전은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상부상조의 '생활협동공동체'이고, 자연과 더불어 '생태공동체'이며, 깊은 정신적 '영성공동체'입니다. 즉 '한살림세상'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공동체는 전(前)분별, 미분화의 공동체가 아니라, 개체생명 하나하나가 오롯이 살아있는 하나이면서 여럿이고 전체인 공동체입니다.[11)]

11) 조직에 대한 관점도 바뀌어야 합니다. 대중(mass)운동과 결사체(association)를 넘어서야 합니다. 지도와 피지도의 전위조직과 대중조직의 이분법은 옛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뭉텅이 대중 속에는 사람의 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하나가 고유하면서도 우주적인 영혼을 지닌 큰 생명들입니다. 강고한 결사체가 필요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단하게 결속된 사람들은 집단의 이익을 좇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패거리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개체 생명 하나하나에 주목해야 합니다. 동시에 그 내면에 살아있는 형제/자매애적 사랑, 즉 생태적 공공성, 우주적 공공성에 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조직형식으로는 네트워크를 지향하되 모이고 흩어짐이 자유로운 플랫폼/아고라/마당 같은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어떤이들이 정당정치의 종말을 예견하며 플랫폼정치, p2p정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새로운 약속을 해야 합니다. '사회협약', '공동체협약'이 그것입니다. 경쟁의 룰이 아닌 호혜의 규칙에 합의해야 합니다. 나아가 새로운 공동체 협약은 근대적 계약을 넘어서, 마음속 깊은 내면에서 공감하고 공명하는 이심전심의 공동체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인간, 새로운 문명을 열어가는 새로운 시민사회운동입니다.

나비혁명: 2013년을 한국형 문명전환운동의 원년으로

다시금 떠올립니다. "내가 바뀌면 우리가 바뀌고 우리가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나비혁명'이라고나 할까요? '허물을 벗고'라는 말이 딱 들어맞습니다. 알의 시대와 애벌레의 시대와 번데기의 시대를 넘어, 나비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의 몸부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3년 새해, 생명운동을 선언하고 시작한 지 30년이 지나고 이제 새로운 3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30년을 맞이하며 이제 본격적인 전환운동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의식의 전환, 생활의 전환, 시스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먼 훗날 생명운동의 새로운 30년을 시작하는 2013년을 사람들은 한국형 문명전환운동의 원년으로 기억할지도 모릅니다.
조안나 메이시가 말한 산파의 역할이 다시 생각납니다. 생명평화운동은 진정 죽임의 문명의 호스피스 역할과 더불어 살림의 문명의 산파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peer to peer politics)를 제시하기도 합니다.(물론 여전히 대중과 결사체와 네트워크, 그리고 플랫폼과 공존해야 합니다.)

2013년 국내외 주요 일정 및 제도 변화

● 2013년 국내외 주요 일정

월	행사명	개최 장소
2월	북한 3차 핵실험 실시(12일) 이탈리아 총선(24일) - 유로존 재정위기 영향 18대 대통령 취임(25일) 지속가능한에너지의 날 컨퍼런스(2/27~3/1)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한국 오스트리아 벨즈
3월	중국 전인대에서 시진핑 주석 취임(5일) 동일본 대지진 2주기 (11일) 아시아민중기금 이사회(22일) 세계 물의 날(22일) 세계사회포럼(26~30일)	 튀니지
4월	지구의 날(22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24일) 보아오 포럼(아시아판 다보스포럼)(13~16일) 동학 보은취회 120돌(4/26~5/4일)	 한국 중국 하이난 보은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5월	무위당 19주기 행사(25일)	원주
6월	세계환경의 날(5일) 이란 대선(14일) 아랍의 봄 진원지 튀니지 대선, 총선 동시 실시(23)	
7월	협동조합주간(1~7일) 민법상 성년 기준 연령 하향 조정(20→19세)(1일) 일본 참의원 선거(하순)	
8월	인농 3주기 추모일(17일)	
9월	G20 정상회의 개최(5~6일) 독일 총선 - 메르켈 총리의 총리 3선 도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10월	남양주 슬로푸드 국제대회(1~6일) 대구 세계에너지총회(13~17일) 세계식량의 날, 화학조미료안먹는 날, 反GMO의 날(반지의날), 몬산토 반대의 날(16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30일)	
11월	농민의 날, 가래떡 데이(11일)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19, 11~22일)	 폴란드 바르샤바
12월	한살림 시작한 날(4일)	

● 2013년에 변화되는 주요 제도[12)]

- **축산업 허가제 도입:** 일정규모 이상 가축(소, 돼지, 닭, 오리)을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함. 축산법상 축산업의 4개 업종 중 종축업,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 3개 업종은 규모에 관계없이 2013년부터 허가제를 도입하고, 가축사육업은 축종별 사육규모에 따라 2013~16년까지 단계별로 허가제 도입할 계획.

- **축산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현재 사료시장에서 축산농가의 외상거래 비중이 약 50%이고 이자율 부담이 약 12~15% 인데, 약 1,700억 원(3%, 2년 상환)을 지원하여 이자율 부담을 줄임으로써 축산농가 경영비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료구매비용을 절감시켜 농가 경영부담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적용 축종 확대:** 2013년에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를 산란계에서 돼지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 (2012년 산란계 → 2013년 돼지 → 2014년 육계 → 2015년 한육우 젖소로 단계적 시행)

- **식물 신품종 육성자 권리 강화:** 식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우수 품종 육성 및 우량종자의 보급 촉진을 목적으로 신품종 보호권을 침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함. (시행일: 2013년 6월 2일)

-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 개편:** 현행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를 무항생제 수산물과 활성처리제 비사용수산물 인증제도로 개편 시행함. 강화된 기준을 준수하여 생산된 수산물에 대해 유기수산물 인증제도 실시. (시행일: 2013년 6월 2일)

- **친환경 농식품 인증제도 통합 일원화:** 다원화된 친환경 인증 제도를 통합·일원화하여 친환경농어업과 유기식품산업을 육성·지원하는 목적으로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으로 명칭을 바꾸고 인증대상 범위를 '유기수산물', '무항생제 수산물',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로 확대함. (시행일: 2013년 6월 2일)

- **동업종 또는 이업종 간의 소규모 협동조합에 자금 지원:** 동(同)업종 또는 이(異)업종간의 소규모 협동조합에 공동의 이익창출을 목적으로 공동브랜드, 공동마케팅, 공동설비, 공동구매, 기술 개발 등에 대해 협동조합 당 일정 규모 한도 내에서 지자금을 지원(국비 80%, 자부담 20%). 10~20개 업종 우대(시범운영). (시행일: 2013년 1월)

12) 대한민국정부, <201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 참조.

- **유전자변형미생물 및 생산공정이용시설 안전관리 제도화:** 지금까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 상 생산공정 중에 이용하는 유전자변형미생물에 대한 별도의 안전관리 조항이 없었으나, 올해 말 개정될 LMO법에 따라 유전자변형미생물에 대한 이용승인을 받아야 생산공정시설 설치·운영이 가능하게 됨. 또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연구시설을 폐쇄할 때 신고하도록 하고, 국내 유통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국민건강과 환경에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정부가 연구·생산시설, 보관장소, 주변지역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함. (시행일: 2013년 12월)

- **농업기계 배출가스 규제제도 시행:** 그동안 비도로 이동오염원에 대한 배출가스 관리를 건설기계에 국한해 왔으나 농업기계에 대한 국내 환경기준 신설을 통해 농업기계에도 배출가스 규제 제도를 시행함. 농업기계 제작·수입 업체는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환경인증을 받아야 하며, 트랙터, 콤바인 2종에 대해 우선 적용한 후 추후 규제대상을 확대할 계획임. (시행일: 2013년 2월)

-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한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됨. 이를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 저감을 유도하고 음폐수 자원화시설 설치를 통해 에너지화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 (시행일: 2013년 1월 1일)

- **육상발생폐기물 중 해양배출 허용대상 폐기물 축소:** 해양환경과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주변국과의 환경 분쟁 예방과 국제협약 가입국으로서 의무 이행 등을 위해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해양 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을 단계적으로 대폭 축소시킴. (배출금지 항목: 2012년 가축분뇨, 하수오니 → 2013년 음폐수, 분뇨 및 분뇨오니 → 2014년 산업폐수, 폐수오니)

-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보고 기관 통합 운영:**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보고를 기존에는 소비자(한국소비자연맹), 영업자(한국건강기능식푸몁회), 의료전문가(식품의약품안전청)로 나뉘어 운영해 왔으나 2013년부터 식품안전정보원으로 일원화시킴.

-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인건비 지원비율 변경:** (예비)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도 일자리 창출산업 지원 비율을 하향 조정함. 2012년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 비율이 최저임금 기준 2012년 1년차 90%, 2년차 80%, 3년차 70%이던 것을 2013년부터 2년차 70%, 3년차 50%로 조정.

- **최저임금액 인상:** 2013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4,860원으로 인상함. 적용 대상 근로

자는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됨.

- **'농어촌사회공헌인증제'로 우수기업에 다양한 혜택 제공:** 농어촌마을과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등을 통해 농어촌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기업 및 단체 등에 대해 정부(농식품부)와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인증서를 발급하는 '농어촌사회공헌인증제'를 도입. 인증 기업 또는 단체는 농협·수협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 자금조달, 정책사업, 물품구매·용역계약 등에 다양한 혜택을 받도록 함.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확대 및 표시 방법 등 개선:** 저가 수입농산물의 국산 둔갑 방지와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음식점 원산지 표시방법을 개선함. 농수산물 가공품 중 김치류 및 음식점의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은 현행 쇠고기·돼지고기 등 12개 품목에서 고등어, 명태 등을 포함 16개 품목으로 확대하며, 글자 크기, 표시 위치 등을 개선하여 소비자 오해 요인을 제거토록 함.

(100-412) 서울시 중구 광희동2가 360번지 동호빌딩 5층 http://mosim.or.kr

격월간 정세와 동향

모심의 눈 살림의 길

제6호

발행일 2013년 2월 18일 | 발행인 박맹수 | 발행처 모심과살림연구소